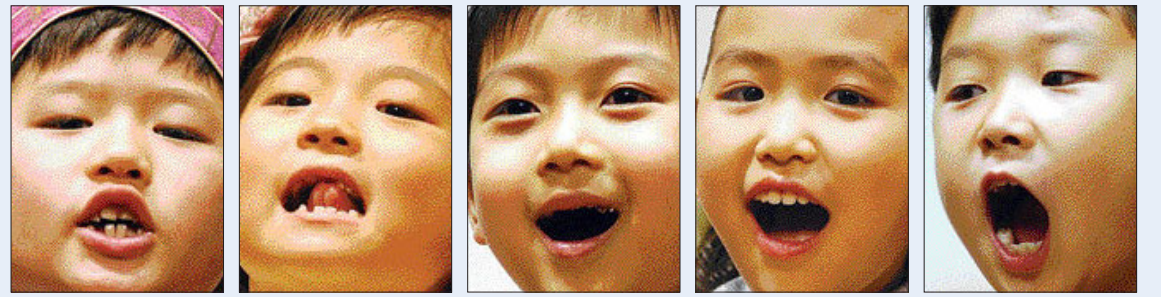


5월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광주일보 주최 제51회 호남예술제가 열기를 더해하고 있다. 2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성악 독창 초등 1·2학년부에 참가한 학생들이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노래하는 모습이 진지하기 그지없다. /최현배기자 choi@



박세현(동문·2) 김아연(대성·2) 황선희(살레시오·2) 정소희(유촌·1) 박준석(운리·2) 송희영(동우·2) 박재원(삼육·2) 박태준(유안·1) 신지우(풍영·2) 조승민(만호·2)

단체장·지방의원 소환 가능해진다

주민소환제 내년 7월부터 시행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 시·도의회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소환 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조례 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본격적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치인 소환을 규정한 주민소환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민소환관련법은 공

포 후 1년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임기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재신임 절차에 의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

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 입법은 그동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5개 시민단체가 3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2004년 7월 이들의 요구와 주민 1만8천915명의 발의에 따라 공직자소환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나 대법원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기할 바 있다.

이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국 327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해 8월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를 결성, 주민소환투표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 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매기록종 '꼬까울새' 흥도서 확인

국내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는 딱새과 소형 조류인 가청 '꼬까울새'(EUROPEAN ROBIN) 1마리가 국내 최초로 신안군 흑산면 흥도에서 확인됐다.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31일 사이 흥도 1구 우체국 좌측 산길 가장자리에서 본래 서식지에서 벗어나 우연히 흥도에 기착한 '길 잃은 새'(미조)인 꼬까울새를 발견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학생부 50%이상 반영

현 고2부터...논술은 본고사 논란없게 최소화

'2008대입전형' 24개대 합의

현재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별 고사는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범위 내에서 최소화된다. <관련기사 7·8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전남대 등 21개 주요 국·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2개 국립대학과 호남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12개 사립대학 입학처장이 합의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 전형과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되도록 확대해 학생부 대입전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대학별 고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반영하며 특히 논술고사는 본고사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입학처장들은 또한 소질·적성·특기를 살리는 다양한 전형형을 도입하고 동일계 진학, 소외계층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확대해 대학 특성화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오는 18~19일 회의를 열고 2008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고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6~7월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의 주요사항을 확정, 대교협을 통해 발표한다. /황대중기자 hwangtae@

社告

'효율적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

11일 오후 2시 광주·전남중기청 대회의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최근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원가절감, 환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또 1대1 현장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환리스크 인식을 높이고, 환율변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광주권에 이어 동남권(7월 13일·광양시청)·서남권(10월 19일·목포시청)에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수출중소기업체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06년 5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
- 강사: 오세돈(외환전문가그룹 FMP 대표) 임수현(수출보험공사 대리)
- 내용: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및 지원제도
- 문의: 광주일보사 경제부(2200-64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360-9190)

光州日報社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문의: (062)227-0541, 222-8111

총학생회 동학 56년 헌신부 주관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신원동길 10 (062)770-0111 ▶T.(062)670-4300

새로 탄생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영암로10길 10 (068-5001) ▶T.(061)360-5000

국가 36년 정보의 매커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總物價情報

<http://www.kpi.or.kr>

▶정무동길 10 (062)227-0541 ▶민중거리동시거리

▶한국물가정보 TEL:1577-7300 FAX:15773-4802

부동산 등 6개법안 강행 처리

우리·민주·민노 표결 공조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한남동 공판

에 봉쇄된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3·30 대책 후속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을 비롯, 도시·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법·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법·주민소환제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차례로 직권상정, 25분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3법중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안은 한나라당의 의사전행 저지 속에 우선순위에 따라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본회의의 법안 처리를 전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고상, 욕설이 오가는 등 충돌사태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

5·3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

5·31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선거광고입니다. 많은 후원자금을 사모해야 합니다.

www.kwangju.co.kr

인터넷 광고사업 | 5월 14일~17일 20일까지

▶문의: 062-227-9600

상담 및 문의 | 062)227-9600